

도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 “단풍고춧가루, 정읍 대표 농특산물 되도록 최선”

농산경위, 신태인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 찾아  
“농가소득 증대 기여  
옛 명성 되찾을 수 있길”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23일 정읍시 소재 신태인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방문,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20년간 청결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특산물인 고추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태인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농가의 고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가공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단풍고춧가루는 15개의 공정 과정을 거쳐 만큼 위생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특수 가공에 의한 살균처리로 한국 식품개발 연구원의 특허 기술을 도입, 장기간 보존해도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고춧가루 주원료인 건조추를 100% 우리 지역에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는 지난 23일 정읍시 소재 신태인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방문,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서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95톤의 가공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계약재배 수매량을 늘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정읍고추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주영은 의원은(전주 9)은 “단풍고춧가루는 지리적으로 명품 고추 재배에 최적화된 기온과 일조량으로 정읍 고추만의 단내 나는 매운맛과 향이

일품으로, HACCP 인증과 2021년 전라북도지사인인증상품으로 선정될 만큼 위생뿐만 아니라 맛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정읍의 대표 농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지의정을 계기로 농산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농가 소득향상 및 지역 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월주스님 빈소 찾아 삼배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김제시 금산사에 마련된 태공왕 원주 대종사의 빈소를 조문, 삼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문 정부 갈아엎자는 건가”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 관련  
“뒤엎지 않고서는 천문학적 재원 마련 못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승계하자는 건가 갈아엎자는 건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고히 뒤엎지 않고서는 25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호연정당을 따져보기 이전에 이처럼 무모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얼마나 자각착각인지부터 살펴보겠다”며 “예산 절감으로 2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25조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전제가 우선돼야 한다. 무엇을 어디서 줄이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매년 25조원을 낭비하는 정부가 되버린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연 100만원을 지급 청년(19~29세)에게는 추가로 연 100만원

의 청년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으로는 재정개혁과 조세감면분 축소로 각각 25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지급 규모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 확보는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신설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증세 대상으로 국도보유세와 탄소세를 지목하셨다. 이쯤에서는 이 후보를 탓하기 전에 주변 정책 참모들을 꾸짖고 싶어진다”며 “조세재정의 운영원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아마추어적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만든 취지는 궁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지대와 탄소배출량을 줄여 그 세금을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 정책이 다 착실히 안착하면 세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두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나눠주려 하더니 두 조세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정책 목표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의 재원 마련 방안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이제 죽한 줄 알고 그만하자. 같은당 후보로서 다른당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편치 않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지역 사법서비스 제고 ‘가정법원’ 설치”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지역 사법서비스 제고를 위해 ‘가정법원’ 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변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 인프라”면서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하나 하나가 도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도 도내에 전문 법원과 전문 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북변회에 따르면 1963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울산, 수원 등 전국 각지에 가정법원이 설치됐다. 현재까지 가정법원 설치 계획이 없는 광역 지자체는 전북과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홍희섭 전북변회장은 “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도민들의 재판권을 관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별개로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주지방법원 가사소송 담당 재판부는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다”며 “이처럼 가사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대신 처리하는 상황임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에 비해 더 많은 가사 사



건의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전주지법 관할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1만7329건으로, 울산은 같은 기간 총 1만4580건으로 3000건 가까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회장은 “앞으로 가정법원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내 각계각층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도민들이 전문적인 재판 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리에 함께한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8일 전주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법원의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전주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북변호사회와 협의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도록”

행자위, 선유도 해수욕장 찾아  
110시민구조대 운영 현황 점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지난 23일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을 방문해 110시민구조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수난구조훈련을 참관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19수상구조대원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활동 시 대원들의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간 도내 주요 물놀이 지역 12곳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와 구명보트 등 장비 7대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수난 인명구조훈련은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익수자를 소방무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3일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을 방문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수난구조훈련을 참관했다.

인기(드론)를 활용해 수색하고, 고무보트와 소방헬기 등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이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여름 휴

가철을 맞아 전라북도를 찾은 많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다문화 비중 증가에도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정책과제 산재 여전”

도의회 인재양성 연구회  
다문화 삶의 질 향상 간담회

전북도의회 인재 양성 및 다문화 연구회(대표의원 황의탁)는 지난 23일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과 황의탁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진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소속 다문화가정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우복남 박사가 다문화정책 관련 주요 이슈와 법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 양상에 대해 발제한 뒤 토론자들이 정책 입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



전라북도의회 인재 양성 및 다문화 연구회는 지난 23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황의탁 의원은 박사는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정책과제가 여전한 산재해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다문화 가정의 취업과 자녀 문제 등 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지방정부 단위로 다양한 배려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황의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통합적 관리 조직 신설 등 도내 다문화가정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며 “이러한 방안을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법 개정 전이라도 최대한 지원책 모색”

문 대통령 “천안함 전사자 자녀 보상금 수급 상향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중을 해군 상사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관련,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천안함 폭침 당시 승진 정 상사의 부인 정모씨는 지난 21일 암투병을 하다 4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정씨의 사망이 알려지면서 홀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생 자녀의 생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 상사 자녀는 법에 따라 만18세가 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상금이 지급되며,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

다만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지원되며, 등록금은 면제되고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 아울러 졸업 이후 취업지원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추가 의원입법 등을 통해 조만간 법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 도의회 교육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3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한 조례안은 학교 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심리 치유 및 학업지원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자원을 위한 안전이다.

의원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로 도내 학생들이 건강하고 소외 없는 학교생활을 해나갈 바란다”며 “이후에도 학생지원에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학 중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방역 시스템을 지속해서 관리해 지역 감염위험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